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2009. 2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2009. 2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요 약>

-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북한은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기대가 무너지자 대남비방을 시작하여 점차 수위를 높여가다 2009년 들어 전면적 군사대결 돌입 선언에 이름.
- 북한의 대남 비방 본질은 변화거부임.
 -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기를 거부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임.
- 북한의 대남비방은 대내, 대외, 대남의 다목적용이나 시기별로 조금씩 그 중요성을 달리함.
 - 2008년 초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고화되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남용이 우세하였으나,
 - 2008년 말 이후에는 핵문제의 일부 진전과 오바마 대통령의 출범을 전후하여 대미용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 최근 들어 내부결속용 성격이 보다 부각됨.
- 대내적으로는 북한 엘리트들의 동요 차단과 체제통제의 명분 확보 등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미, 대남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함.
- 그동안의 구두협박이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실질적 도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도발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북한은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북한의 대남 비방 현황 및 특징	3
1. 현황	3
2. 특징	9
III. 북한의 의도	12
1. 대남 비방의 본질: 북한의 변화거부	12
2. 대내용 의도	13
3. 대남용 의도	16
4. 대외용 의도	18
IV. 파급 효과 및 전망	20
1. 파급 효과	20
2. 전망	21
V. 대응 방향	23
1. 일관성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견지	23
2.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노력	24
3.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차단	24
4. 북한의 행태에 대한 홍보 강화	25
5. 북한의 도발 빌미주지 않도록 유의	25
■ 부록 1 북한의 전통적 대남 인식 및 평가	26
■ 부록 2 북한의 대남 비방 일지: 2008년 2월~2009년 2월	32

I. 문제 제기

- 북한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전까지 비판이나 논평 없이 침묵하였으나 취임이후 대남비방을 시작하여 점차 수위를 높여가다 2009년 들어 전면적 군사대결 돌입 선언에 이름.
 -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 관계의 평화번영을 강조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고위급 축하사절 파견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 대통령 취임 직후 ‘비핵·개방·3000’에 대해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난 시작(2.29, 조선신보)

-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북한은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기대가 무너지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 있으며 핵심적 내용으로 10·4선언의 불이행을 지적함.
 - 북한의 10·4선언 이행 촉구는 실질적으로 북한 스스로는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게 햇볕정책을 승계하라는 요구임.

- 이후 북한은 10·4선언 이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10·4선언을 독점하면서 주요한 대남 비방 도구로 활용함.

-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햇볕정책 하에서 북한이 누렸던 정치, 경제, 외교적 혜택의 상실에 대한 좌절감에 기인함.
 - 햇볕정책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인정·지원하였고

- 경제적으로 지원과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 외교적으로 핵문제, 인권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였음.
- 북한의 대남 비방은 대내, 대외, 대남 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 시기별로도 그 목적과 강조점에 차이를 보이는 등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임.
- 본 고는 지난 1년간 북한의 대남비방의 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북한의 의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북한의 대남 비방 현황 및 특징

1. 현황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긴장을 고조시켜왔으며 북한의 대남비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집중 비방

- 북한은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함.
 - 2월 29일 조선신보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나가다,
 -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며 비난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PSI, MD 참가 움직임에 대하여도 비판
 -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의 대북정책 발언을 실명 거론하여 비판
- 3월 27일에는 “북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정부요원 전원을 철수시킴.
- 이명박 대통령의 상설기구 제안에 대해 노동신문 논평(4.26)을 통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로 만들고 분열을 영

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5월 24일 남한의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한계를 지적한 것을 두고 “반북대결고취안”, “반통일교육안”이라고 비난함.
- 대남비방 속에서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을 촉구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불이행으로 부각시킴.
 - 북한은 ARF 외교장관회의('08.7.24-25)와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08.7.27-30) 등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지지'를 이끌어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함.

나. 군사적 시위 및 협박

-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08.3.2-7)을 하루 앞두고 북한은 서해상에서 300여발의 포사격을 가했으며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3월 13일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3월 27일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온 직후 3월 28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기를 발사함.
- 3월 29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대책에 관한 김태영 합참의장

의 발언을 “선제타격”으로 해석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대화와 접촉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함.

- 3월 30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서울 불바다”를 넘어서는 “젯더미” 극언을 함.
- 4월 2일 ‘불가침 합의 준수’와 ‘긴장조성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국방부의 전통문에 대해 북한은 수용을 거부함.
- 5월 8일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제2의 6·25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함.
 - 북한은 제2의 6·25전쟁, 제3의 서해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대남비방을 지속함.
-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8월 9일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은 “금강산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의 추방”과 “군사분계선 통과 차량의 엄격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2009년 들어서 북한의 군사협박은 보다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격화됨.
 -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 군사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발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의지를 강력히 내비침.
 -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은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면서,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하며 남북기본합의서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하여 이른바 NLL 무효화를 선언함.

- 노동신문(2.1)은 조평통 성명을 거론하면서 북측 경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외면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사적 협박 수위를 높임.

다. 촛불시위 및 경제위기 선동 및 편승

- 북한은 촛불시위 및 경제위기 등 남한정국의 불안정 요인에 적극 편승하여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무력화를 기도함.
- 북한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남한 내 촛불시위에 적극 개입하여 선동함.
 - 한국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방침을 “용납못할 범죄행위” 등으로 비난·보도(5.7, 민주조선)
 - 북한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촛불집회 지지 표명 및 반정부 투쟁을 선동(6.7, 조선중앙통신 등)
 - 북한은 「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촛불집회 배후론’을 ‘우리정부가 탄압 구실을 찾기 위한 불순한 기도’ 등으로 비난(6.20, 조선중앙통신)

- 촛불시위 관련 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움직임을 비난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10.28, 조선중앙통신)
-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함.
-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함.

라. 이슈별 비난

- 인권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등 북한에 부정적인 이슈가 제기될 때 마다 어김없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섬.
-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3.3)한 것에 대하여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였음.
 - 제네바 북한 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답변권을 통해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함.
 -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3.6)를 내고 “반민족적 망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의 새 정부를 ‘독재정권들의 후예들인 보수집권세력’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 북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비릿 문타폰(Muntarbhorn)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3.27)에 찬성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

기하는 것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4.12,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등).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반복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북한은 한국정부의 인권 거론이 체제와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며 남북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평가함.

○ 11월 25일 한국정부의 대북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대해 “도발책동”이라고 강력 비난함.

○ 아울러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강점하에 놓여 있는 남조선에 있으며,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역공을 함.

○ 남한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특히 8월 김정일 건강악화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최초의 당국간 회담(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항의함.

- 5월 30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은 대남 통지문에서 전단살포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의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함.

- 10월 2일 군사실무회담 북측대표단 “개성공단에 차질” 경고

- 10월 28일 군사실무회담 북측대표단 “군 실천행동” 경고

○ 합동군사훈련 등 기타 군관련 행사에 대하여 남한정부가 과거와 같이 ‘눈치보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함.

- 3월 3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 6월 28일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군부대 순회공연을 “정치적 도발, 반통일적 처사”라고 비난
 - 7월 3일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을 “반공화국 광란극”이라고 비난
 - 10월 31일 ‘08호국훈련’을 “예비전쟁 책동”이라고 비난
- 이밖에도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번번이 비난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함.
-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12.29, 로동신문) 등

2. 특징

가. 구두협박 → 행동돌입 → 군사협박

- 초기 북한은 군사적 시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절제된 행동을 하면서 주로 구두협박에 머물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7.11)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차단조치 등 행동을 시작하고 새해 들어서에는 전면적 군사대결을 선언하는 등 군사적 차원의 협박에 돌입함.
- 초기 북한이 포사격시(3.1)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발사시(3.28) 그 방향을 북측으로 한 것 등은 절제된 행동의 예

- 금강산 피살사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통과 차량의 엄격한 통제”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는 등 남북 관계 경색을 행동으로 옮김.
 - 북한은 우리의 현장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관광중단을 선언함.
- 12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을 통하는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함.
 -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 새해 들어 전면적 군사대결 태세의 진입(1.17)과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1.30)하는 등 군사적 협박을 본격화함.
 -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온 류경수 제105 탱크사단을 김정일이 1월 3일 방문하여 전쟁 가능성 시사
-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사적 협박 수위를 높임.

나. 통민불관

- 남한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모든 대화 및 행사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하여는 변함없는 의욕을 보이는 등 철저히 당국과 비당국을 분리하여 대응함.
 - 4월 26일 상설대화기구 제안, 7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8월 29일 「8·15 이산가족 초청행사」 거부
 -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7.11)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 을 인정하고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고 식량난에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북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거부
- 개성공단의 철수대상을 당국요원으로 국한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와 전면차단’ 조치도 당국자만 대상으로 함.

- 민간차원의 경제·사회교류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오히려 증가하였음.
 - 남북 방문은 2007년 15만 9214명에서 2008년 18만 6000여명으로 증가
 - 남북교역액은 2007년 17억 9700만달러에서 2008년 18억 2000만달러로 증가
 - 개성공단 근로자는 2007년 12월 2만 2,804명에서 2008년 12월 3만 8,206명으로 증가
- *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남북교역 감소

다. 남한 책임론 강조

-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에 돌리려 함.
-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 내부사정 등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로 반발함.

Ⅲ. 북한의 의도

1. 대남 비방의 본질: 북한의 변화거부

- 북한의 대남 비방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기를 거부하는 데 기인하며, 북한은 햇볕정책을 계승하라는 요구를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주장으로 표현함.
- 오히려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거부·비방하면서, 여전히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함.
- 햇볕정책하 남북관계는 정치적 고려하에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한계에 이룸.
 -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면서 과거와 같이 지원과 경협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
- 이명박 정부가 과거처럼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쌀과 비료를 제공하면 되나, 그런 식의 남북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음.
- 대규모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북한이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임.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초기 햇볕정책의 계승을 촉구하였으나 하반기 들어서 기대를 버린 채, 미국으로 돌아서 북·미관계를 개선한 후 한국에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음.
- 그러나 소위 통미봉남 정책도 북한이 폐쇄체제를 고집하는 한 한계에 봉착할 것임.

2. 대내용 의도

가. 대남 적개심 고취를 통한 체제결속 도모

- 그동안 북한 당국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체제안보를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해 왔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 왔음.
 - “<대화>의 막 뒤에는 숨은 원수들의 음흉한 속심을 똑바로 꿰뚫어 볼”것을 주문하면서,
 - “정세를 대하는 데서 절대로 걸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적들이 요란스럽게 불어대고 있는 <대화>타령은 철두철미 침략전쟁의 연막”임을 강조
-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비방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대남환상을 억제하거나 사회 일탈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김정일 체제안보를 위해 역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임.

- 대내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남북대화 및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배태될 수 있는 ‘환상’이나 ‘대적의식’ 완화에 따른 사회적 해이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됨.
- 북한은 대남 비난·비방을 단순히 부정적 대남성토 차원을 넘어 공세적인 대남 군사위협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긴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 동원체제 유지 및 주민결속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 명분하에 주민동원을 통한 주민 통제 및 결속 강화로 체제안정화 도모
- 특히, 최근 내부통제 이완에 대하여 불안감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보다 자극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임.
 - 새해 들어 시장을 한 달에 3회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은 내부적 갈등과 논쟁의 결과
 - 최근 김정남과 김정운의 후계자 지명 혼선 등으로 인한 엘리트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할 필요성 제기

나. 남북관계 경색 책임 남한에 전가

-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을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제시를 통해 희석시키는 한편,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김정일장군’과의 일심단결 및 절대충성이 필수라는 논리를 전개해 왔음.

-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민족론’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 논리를 통해 남한의 당국 및 비당국(NGO)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공존공영’을 일정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한의 대북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 전략 운용이 여의치 않자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있음.

다. ‘선군정치’ 지속 명분 축적

- 경제난 이후 조성된 체제불안정 해소를 위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도입하여 김정일 절대지위 보위, 주민일탈 최소화, 미국의 대북 ‘압박’ 제어 등 다양한 성과를 획득하였는바,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군사적 안보 획득이 없는 한 선군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러나 2007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우선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지속할 명분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보 및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인 북한은 주민통제를 위한 선군정치 지속 명분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실용정책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3. 대남용 의도

가. ‘남한 파쇼론’ 정당화

- 남한을 ‘미제 신식민지 및 파쇼체제’로 규정해 온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실용’ 정책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동일시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정’ 등 일련의 정책을 ‘파쇼체제 회귀’로 규정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남한파쇼체제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을 ‘파쇼’, ‘역적패당’, ‘역도’ 등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확대시키고, 남한주민들의 대정부 공세 강화를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나. 남한 내 ‘반이명박 정서’ 확산 도모

- 남한 내 이념적 지형은 대체로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 정도의 분포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양 정부는 진보 및 중도적 성향 국민들의 지지 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보수 및 중도성향의 지지를 통해 대북 ‘실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적 지향을 파악한 북한은 전통적 포용론자들에게 명분을 주어 대북 정책에 관련한 ‘반이명박 정서’를 형성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 도모

- 남한 대선 기간인 2007년 11월 초 이후 북한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중지한 채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에 대한 비방에만 주력하였음.
- 이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도의 발로였던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후보 당선 및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지속 천명을 기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 지속을 공식 천명하지 않음.
- 이에 실망한 북한은 2008년 4월 1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규정하여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된 분위기로 전환되었음.
- 이는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여 남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됨.

라.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한의 전유물화 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림으로써 남북관계의 도덕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향후 남북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대남 심리전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
 - 남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약점으로 이용

4. 대외용 의도

가.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관심끌기

-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문제를 우선 정책과제로 다루어 달라며 관심을 끌고자 함.
 -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시사
-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군사대결 돌입 선언과 함께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함.
 - 핵 군축차원에서 북한핵과 미국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로 2단계 비핵화를 종료하고, 3단계에서 평화협정, 핵 군축문제, 미사일 문제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검증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6자회담 등에서 남한 배제

-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야기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가한 후 6자회담에서 남한측을 배제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공

- 이명박 정부를 ‘비민주적 정권’으로 규정하여 북한에게 집중된 인권 문제를 남한인권문제로 전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IV. 파급 효과 및 전망

1. 파급 효과

- 북한의 대남비방은 대내, 대외, 대남의 다목적용이나 시기별로 조금씩 그 중요성을 달리함.
 - 2008년 초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고화되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남용이 우세하였으나,
 - 2008년 말 이후에는 핵문제의 일부 진전과 오바마 대통령의 출범을 전후하여 대미용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 최근 들어 내부결속용 성격이 보다 부각됨.

- 대내적으로는 북한 엘리트들의 동요 차단과 체제통제의 명분 확보 등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남 적개심을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나쁘니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주장('09.1.31, 로동신문)

- 그러나 대미, 대남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함.

- 미국은 부시행정부에서 “나쁜 행동에 대하여 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협박에 대하여도 북·미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절하함.
 -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위해 “손가락으로 밥상을 때리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함.

- 대남용으로 2008년 4월 총선과 촛불시위 등을 겨냥하여 공세를 강화하였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북한의 긴장고조에 대하여 차분한 반응
- 최근들어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하여도 남한정부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되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함.
 - 야당이나 재야단체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협박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 일반국민도 크게 동요하지 않음.
- 금년 2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경고 무시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북한의 카드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북한은 지난 1년간 남한의 ‘무시전략’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경고와 협박의 수위를 높여옴.

2. 전망

- 그동안의 구두협박이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실질적 도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도발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북한은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 따라서 가급적 도발하지 않고 카드의 효과를 벌 수 있는 것이 북한에게는 가장 바람직함.

- 북한이 도발 직전까지 가는 긴장고조를 노리겠지만 반드시 도발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실제 도발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파탄으로 이어져 북한에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음.
-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실제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도발의 경우,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도발
-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남한의 대북 태도도 요지부동이며, 내부적으로 춘궁기에 대량아사가 발생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있음.
 -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6월 정도 가능
- 북한은 무력충돌을 통해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승리를 선전함으로써 대내결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패배할 경우 대외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로 인한 핵무기 보유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내부적으로 북한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서 북한군 피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음.
 -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피해를 과장하여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V. 대응 방향

1. 일관성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견지

-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인내의 시간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북한에게 또 다시 끌려가게 됨.
 - 북한은 이를 승리라고 선전하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될 것임.
- 협박 하에서건 싸움 이후에건 북한이 요구하는 식의 남북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함.
 - 무력충돌 이후에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적 원칙이 적용되어 발전되는 남북관계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띠는 이점이 있음.
 - 원칙 보다 일시적 필요성(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결정될 경우 남북 양측의 국내적 사정과 의도에 남북관계의 모습이 악화 또는 호전되는 취약성을 띠게 될 것임.
 - 특히 북한은 일회성으로 남북대화나 협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노력

- 북한의 내부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고 스스로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측면이 있음.
- 김정일의 건강문제, 내부통제 이완, 엘리트들의 동요 등 북한 내부문제의 악화와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거래방식의 정착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함.
 -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투명성 제고

3.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차단

- 북한은 대남혁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화와 협상전략을 적극 구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에 철저한 정책추진 필요
 -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 아닌 ‘정상’(남한)과 비정상(특수 체제의 북한) 체제 간의 관계인 바, 비정상 측의 부정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정한 원칙 견지가 필수적임.
 - 남한 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원칙을 무시한 ‘양보(유화)’정책에 매달릴 경우 이는 곧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결과 초래

-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남북대화 ‘업적주의’에 기초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북한의 대남혁명을 위한 우호적 환경(‘연공연복’ 연대 구축 등)이 크게 확대된 측면을 고려

4. 북한의 행태에 대한 홍보 강화

- 앞으로 대남 협박과 심리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
- 군사적 차원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되 대북정책 차원에서는 차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군사적으로는 긴장고조 단계, 도발단계, 도발 이후 단계로 나누어서 대응해야 하나, 대북정책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내부 홍보를 강화함.
 - 북한의 대남협박은 북한체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정당화함.

5. 북한의 도발 빌미주지 않도록 유의

- 북한은 육상 포진지에서 NLL 부근의 남측 함정을 공격하여 남측의 응사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즉각 서해 도서를 공격할 명분을 얻으려 할 것임.
- 당분간 NLL 지역에서 함선 기동에 신중을 기하여 북한의 도발을 예방함.

■ 부록 1

북한의 전통적 대남 인식 및 평가

- 북한의 대남 비방은 기본적으로 대남 인식에서 비롯된 바, 북한은 남한을 ‘미제식민지’로 규정하고,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한편, 남한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함. 이로부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도출됨.

1. 미국의 ‘(신)식민지론’

- 해방직후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괴뢰’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였음.
 - 이러한 김일성의 시각은 이후 북한의 대남 인식 기초가 되었고 김정일 시대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음.
-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 때문에 북한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제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미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음.
 -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민족해방론’에서 출발함.

- 김일성의 ‘미제식민지론’ 주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46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민주력량을 분렬약화시킴으로써 괴뢰정권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1970년: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
 - 1982년: “우리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는 미제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거기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견디어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1985년: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입니다. 미제는 우리나라의 절반당인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반동적인 괴뢰정권입니다. … 남조선인민들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쇼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 1990년: “남조선에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떼고붙이고 하는 실권자도 역시 미국사람들입니다. …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틀어쥐자는 것입니다.”
 - 1994년: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국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인식민지적 시각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을 고집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미평화협정을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음. 본래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남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하였음.
 -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여야 할것입니다. …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줄이는 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1973년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바뀌었음.
 - 김일성은 197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하루빨리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북미평화협정’을 최초로 강조하였고, 이것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허담 부총리가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쌍방이며 실제상의 당사자들입니다. … 우리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

제를 토의할 것을 미합중국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북미평화협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

- 김일성은 핵문제와 관련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북미간 직접대화 해결방식을 주장하였음.
 - 김일성은 1994년 “지난날 일제는 조선에 총독부를 두고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면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앞잡이를 내세우고 그를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신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주성도 실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과만 대화를 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당국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음.

- 김일성은 사망직전까지 미국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고수하였고, 기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이를 승계하여 남한을 ‘(미제 식민지의) 괴뢰’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본적인 관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북한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2008년 6월 1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백서를 발표, ‘비핵·개방·3000’ 등 대북정책과 각종 대내외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였음.
 - 조국통일연구원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백서

에서 “(이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이라면서 “100일간의 행적은 과거 친미독재자를 무색케 하는 반통일 대결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2008년 8월 25일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고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청산되지 않는 한 인민들은 언젠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분열의 비극과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조평통은 2008년 11월 22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남조선(남한)에 대한 미제(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체제”이고 이 체제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흡수통일”이며, ‘최후 목표’란 “북침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2. ‘남조선 파쇼론’

-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파쇼’로서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파쇼타도’와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바, 민주정권 수립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전제조건이기도 함. 북한의 남한 ‘파쇼론’ 시각의 예는 다음과 같음.

- 1950년: “미제식민지락탈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매국도당을 내세워 공화국 남반부에 파썸적인 경찰테로제도를 세워놓았으며 38선을 계선으로 우리나라를 인공적으로 량단하였다.”
- 1962년: “극소수의 살인집단인 남조선괴뢰도당은 몽둥이정치로써… 어느 한 계급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박정희파썸테로 <정권>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유지하며 우리 조국의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 ‘파썸론’은 남한 최고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음.
- 북한은 지난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썸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남한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바 있음.

■ 부록 2

북한의 대남 비방 일지: 2008년 2월~2009년 2월

날 짜	내 용
1월 1일	북 신년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월26일	조평통, 한미연합해병군사령부 확대·창설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2월29일	조선신보, 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에 대해,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
3월3일	북 외무성, 한미 합동군사연습(3.2)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침략 기도를 확연히 드러낸 전쟁 불장난”이라고 비난
3월5일	6·15선언 북측위, 정부의 공안사범 체포·구속에 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어기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3월6일	북, “남북간의 아무리 좋은 합의도 외세에 의존하면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에서 반외세를 강조
3월6일	조평통, 유엔 인권 이사회(3.3)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이라고 비난
3월11일	북, 한·미·일이 구성에 합의(2.18)한 ‘3국조정위원회’를 대북 침략동맹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
3월1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방송(열린북한방송, 북한선교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을 “반공화국 모략방송책동”이라고 규탄
3월21일	조선신보, 한미동맹 강화는 “동맹강화가 아니라 예측강화”이며, 대운하 구상도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 뿐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난
3월22일	노동신문,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반통일세력이 10·4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자들의 발악이라고 비난
3월24일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발언(3.19)에 개성공단에서 남측당국 인원 전원 철수 요구
3월28일	북, 서해 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날 짜	내 용
3월28일	북 해군사령부, 우리 합참의장의 'NLL은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이라는 발언(3.26)을 비난하면서 수역에서 해상충돌 경고
3월29일	북 장성급군사회담 대표, 우리 합참의장의 '선제 타격' 발언을(3.26) "공개적인 선전포고" 등으로 비난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본격적 비난 개시. 이 대통령의 실명을 총 48회 언급
4월 3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긴장조성행위 중단'을 촉구한 우리 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 북 해군사령부, 남측 전투함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예상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4월 12일	북, 우리 정부의 인권문제 제기(3.4,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대표 연설, 3.27,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1년 연장 찬성투표)에 대하여 "동족사이에 적대감·불신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4월 19일	노동신문 논평,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반대하면서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는 반통일 역적"이라고 비난
4월 24일	조선신보 시론,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는 남측 보수세력의 친미사대, 외세의존의 악습이 나타난 것으로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북측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
4월 26일	노동신문 논평원, 이 대통령의 상설대화기구 제안(미국시간 3.17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 서울·평양 상주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만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폐기된 반통일골동품"이라고 비난
5월 2일	노동신문 등 각종 북 매체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방일 성과에 대해 "전쟁행각", "조공행각"등으로 비난
5월 2일	조평통, 남측의 최신 무기 도입(2010~ 2012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구매결정)을 "민족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역행위"등으로 비난
5월 7일	민주조선, 우리 정부의 쇠고기 수입 방침을 "용납못할 범죄행위" 등으로 비난
5월 8일	북 군사논평원, 남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되어 가고 있다고 비난. "제2의 6·25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5월 13일	노동신문, 쇠고기 수입 개방을 비롯한 사회 내 주요 현안(통일교

날 짜	내 용
	육,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소재로 대남 비난
5월 16일	노동신문, 이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외면하면서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
5월 24일	조평통, 남측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반통일교육안’, ‘전쟁지침서’, ‘대결지침서’ 등으로 비난하며,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의 작품이라고 비난
5월 30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전단(빠라)살포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대남 통지문’에서 이는 “쌍방의 군사적 합의를 부정하는 새로운 도발”이라고 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요구
5월 30일	북, 서해 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월 1일	조국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발표, 특히 ‘남조선의 미국 경제적 식민지화, 문화적 미국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난도질’등을 비난
6월 7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며, 촛불집회 지지 표명 및 반정부 투쟁 선동
6월 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15선언 8주년에 즈음하여 ‘대내외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온 겨레는 남북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6월 9일	북 판문점 대표부, 한·미 국방장관의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 중단 합의(6.3) 비난
6월20일	북 민화협, ‘촛불집회 배후론’을 이명박 정부가 탄압 구실을 찾기 위한 “불순한 기도” 등으로 비난
6월 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남 정부가 ‘3통 합의’를 포함한 그간의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
6월 27일	북 민화협, 남측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였으나 그것은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
6월 28일	북 군사논평원,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군부대 순회공연을 “정치적 도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처사”라고 비난
6월 30일	북 민화협, 대통령 참석 ‘6·25참전용사 위로연’ 등을 비롯한 6·25전쟁 관련 기념행사 등을 비난
7월 3일	조평통, 6월 29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을 “반공화국 광란극”이라고 비난

날 짜	내 용
7월 4일	조평통,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비난.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 ‘비핵·개방·3000’의 추진 등을 비난
7월 7일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김정일과 정상회담 용의” 발언(7.16)에 대하여, “이미 합의된 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면서 수뇌회담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한국 정부는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7월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7.11)과 관련하여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조사 거부
7월 13일	노동신문, 전면적인 대화재개 제의(7.11) 등이 포함된 대통령의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 대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
7월 24일	조평통, 우리 국방부장관의 대북 주적 관련 발언(7.21)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 “선전포고” 등으로 비난
8월 3일	금강산 지역 북한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
8월 7일	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굴욕 외교” 등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 특히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실수를 “실수인가, 고의인가”라고 비난
8월 9일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 차량의 엄격한 통제 등을 8.10부터 실시” 발표
8월 24일	노동신문 논평,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우리(北)를 모해하기 위한 친미사대행위이며 반민족적 대결,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
8월 27일	남에 위장탈북한 북 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 체포
8월 29일	북 적십자회 중앙위, ‘8·15계기 이산가족 초청행사’(8.13-8.29)를 “가소로운 잔꾀”라고 비난
9월 3일	조평통,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9월 4일	북,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성적에 대한 일부 남한 언론의 비판적 논조를 인용하면서 비난. “실용정책이 실패한 6개월”, “잃어버린 6개월”이 되었다고 보도
9월 23일	북 군사논평원,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연습 소동의 위험성을 밝힌다’ 제하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우리정부를 비난

날 짜	내 용
9월 23일	정부 소식통, 북한이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함.
9월 23일	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장 회의에서 “최근 남쪽 기관이 언론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건강이상설을 흘리는 게 도를 넘었다”며 불만을 표시
9월 27일	북,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9.9.정부수립60주년 기념학술회의)한 통일부 장관 발언은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의 대북 전단살포행위는 “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촉구
10월 4일	북, 10·4선언 1돌을 맞이하여 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남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할 것을 선동함.
10월 7일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월 9일	북 해군사령부,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상의 충돌가능성을 경고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
10월 25일	북, 남측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빼라살포 행위’가 남측 정부의 묵인과 비호 하에 강행되고 있다며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10월 28일	북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빼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0월 31일	조평통, ‘08년 호국훈련(10.30~11.8)’을 “위험천만한 전쟁도발 책동”, “예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비난
11월 5일	북, 우리 외통부 장관의 국정감사(10.22)시 ‘제재해제 복원 상정 가능성’ 언급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비난
11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장을 점검
11월 12일	북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단장, 중대조치 단행 통보.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하는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통보
11월 12일	북 적십자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 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통한 모든 남북직통전화 단절 발표
11월 17일	조선신보, 美 대선 이후 통미봉남이 시도될 가능성 시사
11월 19일	정부, 북한 인권운동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

날 짜	내 용
	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
11월 22일	조평통, 방미중 기자간담회(11.16 워싱턴)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발언 비난
11월 2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전면 차단,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제한, 화물운행 중단 등을 통보. 이 ‘12·1 조치’는 1차적인 조치임을 강조
11월 25일	노동신문,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이라고 비난
11월 27일	북, 12월 1일 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11월 28일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12월 1일	북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 차단 조치 실시
12월 2일	북, 미국의 급변사태 대비 및 한·미 동맹 강화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망동”이라고 비난
12월 6일	조평통, 남북경색은 한국정부 책임이라고 주장. 북한의 ‘강경조치’ 관련한 남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응을 또 하나의 도발행위로 비난
12월 12일	조선신보, 현재 남북관계는 “전면차단의 중대기로에 있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여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12월 6일	노동신문 논설, 이명박 정권의 ‘한·미관계 우선론’은 “사대매국론, 동족대결론, 반통일론민족말살론이고 민족파멸론, 북침전쟁론”이라고 비난
12월 6일	조평통, ‘12·1조치’와 관련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11.26, 국회외통위전체회의)을 언급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넘겨쓰우는 책동”이라며 이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
12월 17일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 방문 “12·1조치는 일시적, 잠정적,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12월 19일	조평통, 남 정부의 대화제의에 (남측은)“대화상대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주장
12월 24일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에서 “대화와 협력사업은 남측 현 정권에 의해 하루 아침에 중단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12월 31일	북, 2008년 남북관계 총평.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10·4선언

날 짜	내 용
	부정, 남북대화과 협력의 저지, 반복 대결전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
2009년 1월 1일	북 신년공동사설,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 6·15공동성명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
1월 5일	통일부, 북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상호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1월 21일	노동신문, 현 남북관계가 “6·15 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라고 주장
1월 30일	조평통,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2월 4일	노동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적십자의 대화재개 희망(1.21)표명에 “인도주의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저들에게 북남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듯한 냄새를 풍기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세 분석('08년 7월~12월)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9-03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9년 2월 일
발행일 2009년 2월 일
